

국감 쟁점과 여야 전략

전·현 정권 권력형 비리 폭로전 될 듯

6일 시작되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을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거대 여당의 힘을 보여 주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야당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면서 지지율 제고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국감 대상에 이명박 정부 초기 7개월간의 평가와 함께 노무현 정부 임기말 기간도 포함돼 있는 만큼 전현 정부 실정(失政) 여부를 두고 상임위마다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진보정권에서의 좌편향 정책, 실정, 무능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쇄고기 파동, 경제위기 등을 부각시키며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오만을 파헤쳐겠다고 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전·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폭로전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의혹 등 15개 공격 포인트를 선정한 상태다. KFT 사장 비자금 조성,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AK캐피탈 로비사건, 프라이그룹 비자금 조성,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 기사실 통제합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럼 김옥희씨 공천개입 의혹, 이 대통령 사위 조현범씨 주가조작 의혹,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비리 청탁 의혹,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의 뇌물수수 의혹 및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움직임과 관련한 로비 의혹 등을 공격 대상으로 손꼽고 있다.

전체 상임위 가운데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원혜영 원내대표, 김진표 최고위원,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부터)가 5일 국회에서 국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는 법사, 기획재정 등 13개 상임위별로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478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與, 진보정권 좌편향 정책·실정 부각... 정국 주도권 잡기

野, 김옥희씨 공천 개입 의혹 등 공격... 지지율 제고 나서

신위가 가장 뜨거운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KBS 정연주 사장 해임, YTN 구분홍 사장 임명 문제를 갖고 방송장악 의혹을 제기할 예정인 반면 한나라당은 좌편향 방송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일선불사의 태세를 보이고 있다. '악플'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이 큰바 여론의 '최진실법' 추진을 둘러싸고 급부상

한 인터넷 규제, 억압 논란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종교편향 논란도 쟁점 사안 중 하나다.

기획재정위, 정부위, 지식경제위 등에서는 미 국방 경제위기 대책 및 이명박 정부 책임론, 강만수 경제팀 인책 여부 등이 핫이슈로 부상될 전망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감세 공방도 전망된다.

한나라당이 의욕적 추진 방침을 보이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선진화 방안의 적절성 여부도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에서는 종국발 벨라민 파동에 따른 책임론 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또 법제사법위에서는 최근 검찰의 정치인 수사를 둘러싼 정치인 사정 논란이,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좌편향 교과서 개편 논란, 전교조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간 이념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밖에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및 대북정책 실패 문제가, 행정안전위는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한 여청수 경찰청장 거취 문제,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 발전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지자체 절반 가량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 못해

광주 5곳·전남 10곳

광주·전남 시·군·구의 절반 가량이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 기초 시·군·구의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 5개 자치구의 지방세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도도 22개 시·군·구의 절반에 달하는 10개 지자체가 인건비를 털 만큼의 지방세를 걷지 못했다.

이처럼 지방재원이 열악한 지자체는 나주, 곡성, 구례, 고흥, 보성, 강진, 해남, 함평, 완도, 신안군 등 10곳이다.

또 행정안전부 집계결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57%인 131곳으로 집계됐다.

행정 단위별로는 시의 경우 전국 75개 중 21.3%인 16곳, 군은 86곳 중 76.7%인 66곳, 자치구는 69곳 중 71.0%인 49곳의 지방세수가 인건비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13%

인 30곳은 지방세 수입에 세외수입(수익사업을 통한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을 합쳐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광주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초과했다.

전국 75개 시의 올해 전체 지방세 수입은 8조7천890억원, 인건비는 3조2천544억원으로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이 37%였다.

반면에 86개 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1조56천259억원, 인건비는 1조9천144억원으로 인건비가 수입을 17.7%나 초과해 군보다는 시의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 등으로 모자라는 세입을 충당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세는 대체로 인구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방 중소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지자체의 자주적인 세원을 늘려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형기·윤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장흥 교도소 배식구 국정감사

독도·청년 우포늪도 대상

국회는 6일부터 20일간 478개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488개 기관보다는 10곳이 줄었지만 올해 각종 정치 및 사회현안에 따라 다양한 곳이 피감기관으로 선정되고, 현장시찰 대상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우선 장흥 교도소로 현장시찰을 나갈 예정이다. 장흥교도소는 배식구를 허리 높이로 올려 다시 짓기로 한 것으로서, 소속 의원들은 이곳 방문을 통해 그동안 '개밥 먹는다'고 불린 교정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환경노동위는 경남 창녕의 우포늪을 찾는다.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우포늪 일대를 방문한 뒤, 창원에서 열리는 탐사르 총회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방위는 최근 일본이 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 또 다시 영유권을 주장해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독도를 방문하고, 아시아 최대규모의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도 시찰한다.

국방위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직접 방문해 군부대 경계 상황을 포함한 안보태세를 눈으로 확인하고, 6·25 전쟁을 비롯해 군사 관련 역사 연구원 찬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도 방문한다.

기획재정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돈을 찍어내는 경산 조폐장을 방문한다.

외교통상통일위는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점차 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주 우크라이나,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을 각각 방문, 자원외교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감, 증인채택에 발목 잡히나

윤영위·국방위 등 5곳 일반증인 채택 못해... 파행 우려

고하고, 한나라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 기록물 유출 논란 등과 관련된 증인을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방위는 민주당이 한나라당 유한열 고문의 군납비리 의혹과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증인들을 대거 신청하는 바람에 한나라당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경위는 민주당이 키코 사태와 관련,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장을 전부 증인으로 부를 것을 주장하고 한나라당이 난색을 표명, 협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법사위의 힘겨루기 가장 뜨겁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전·현 정부 비리의혹을 둘러싼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언니게이트', '사위게이트' 이명박 대통령 주변 비리와 관련, 60명 이상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청와대 기록물 유출사건, KTF 사장 비자금 조성 사건 등을 내세워 전직 대통령 측근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정무위는 일단 여야 간사간 백화점, 정유사 대표, 시중은행장 등 증인·참고인 79명을 채택키로 잠정 합의했지만 의견은 미뤄진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등을 요구하고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원자인 강금원 참신섬유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도 여야 간 증인채택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국감 파행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5일 현재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를 제외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단연코 출석해야 할 기관 증인을 제외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일부라도 끝낸 곳은 11곳 뿐이다.

윤영위, 국방위, 지식경제위, 정보위, 여성위는 한 명의 일반증인도 채택하지 못했다. 또 다른 상임위의 경우도 일부 증인을 합의했지만 주요 증인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아직 남아있다.

윤영위는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을 따지겠다고 나서며 청와대 민정 라인 등에 대한 대대적 증인 소환을 예

Every little Plus

홈에버가 홈플러스가 됩니다

생활에 플러스가 됩니다

이웃에 플러스가 됩니다

환경에 플러스가 됩니다

Home plus



홈플러스 사회공헌캠페인 '은과반'